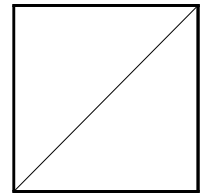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7 호	보 고 사 항
보 고 연 월 일	2022. 3. 30. (제 6 차)	

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 
향후 계획」 보고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3. 30.

## 1. 보고주문

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.

## 2. 보고이유

'21년 제17차 금융위원회에 보고('21.9.29.)된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」 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만큼 세부방안별 추진현황을 점검·평가하고, 기한부조치의 기한연장 등을 검토·보고

\* 금융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에 해당(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제4항 제2호)

## 3. 주요골자

### 가. 추진현황 점검·평가 결과

-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 시행 완료
-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

### 나. 기한 연장 방안

-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여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대출규모 증가,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규제 정상화 추진 필요
- 통합 LCR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연장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단계적 정상화 진행
- 기한이 도래하는 기타 6개 규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연장 후 종료

## 4. 참고사항

가.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」 : <별지>

나. 제6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2.3.24.) 심의필

#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## 1. 보고배경

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을 마련·추진 중('20.4~)

\* 1차 유연화 방안 : '20.4.16.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, '20.4.17 발표  
2차 유연화 방안 : '20.8.26. 제15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, 발표  
3차 유연화 방안 : '21.3.8. 제4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, '21.3.10. 발표  
4차 유연화 방안 : '21.9.29. 제17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, 발표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세부 방안별 추진 현황을 점검·평가하고, 기한 종료를 앞둔 세부 방안들의 기한 연장 등을 검토

### < 기한 종료 예정 세부 방안 >

연번	업권	조치사항	기한
1	은행	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	'22.3월
2		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	'22.3월
3	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'22.3월
4	보험	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'21.12월 평가시 ( '22.3월까지)
5	저축여전	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'22.3월
6	저축상호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'22.3월
7	저축	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'22.3월
8	산은	NSFR 한시적 적용 유예	'22.6월

## 2. 추진현황 점검·평가

◆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

### 가. 자본적정성 규제

#### □ [공통]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 경감

○ (현황)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주식 대비 낮은 위험값 적용 [법령해석\*(은행('20.4.29)) 및 시행세칙 개정\*\*(보험('20.6.30), 증권('20.6.18))]

\* 상장주식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300%이나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 등이 있는 경우 100% 적용 가능 [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[별표3] 134.바(2)]

\*\* 보험사(8~12%→6%) 및 증권사(9~12%→4.5~6%) 출자액 위험계수 인하 [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]

○ (평가) 금융회사의 출자 부담을 경감하여 증안펀드가 증시 안정판으로 기능하는데 기여

< 조치 전·후 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비율 감소폭 비교 >

구분	조치 전(A)	조치 후(B)	차이(C)
(은행) BIS비율	0.27%p ↓	0.09%p ↓	+0.18%p
(보험) RBC비율	1.4%p ↓	0.7%p ↓	+0.7%p
(증권) NCR비율	29.5%p ↓	14.7%p ↓	+14.8%p

#### □ [은행]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국제기준 조기 시행

○ (현황) 「바젤Ⅲ 최종안」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'20.2분기부터 시행

\* 시행세칙 개정('20.4.8) → 도입 신청 접수('20.5.29) → 승인('20.6.26)

○ (평가) 은행(15개) 및 은행지주회사(8개)가 조기 시행 중으로, 해당 은행 등의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\*

\* '20.6월 대비 '21.6월 기준 은행 평균 2.56%p 상승, 은행지주회사 평균 1.86%p 상승

□ **[은행]**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(D-SIB) 선정대상\*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

\* 기존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소속 구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-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(1%p) 부과

○ **(현황)** 은행지주 소속 중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-SIB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('20.6.10)하고 '21년도 선정시 반영('20.6.24)

○ **(평가)** 소규모 지방은행(제주은행)이 D-SIB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자본 적립의무(1%p)가 면제되고 지역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

□ **[은행]** 「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\*」 시행시기 연기

\*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%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바젤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, 우리나라는 '19.3월부터 행정지도 실시하고 규제화 검토 중

○ **(현황)** 기업여신 공급에 제약이 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('20.4.17 보도자료 배포)

○ **(평가)**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

※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, 기업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,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

□ **[증권]**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\* 규제 완화

\* 순자본비율(NCR) = (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) / 필요유지자기자본

① **(현황)** 증권사가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(단,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)

\* (1)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 위험값 하향조정(0~32%→0~16%)[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('20.6.18, '20.9.5<sup>1)</sup>)]

1) 당초('20.6.18) "'20.9월말까지"였던 조치 기한을 "'20.12월말까지"로 연장

(2)증권사가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(위험값 100%)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(0~32%) 적용[금융 투자업규정 개정('20.4.29) 및 금융위 의결('20.4.29, '20.9.24<sup>2)</sup>)]

2) 당초('20.4.29) "'20.9월말까지"였던 조치 기한을 "'20.12월말까지"로 연장

- **(평가)**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\*이 확대

\* '20년말 기준, 8개 종투사가 총 3조4,590억원, 6개 증권사가 총 1조1,737억원 공급

- ② **(현황)** 일정 범위 내\* 중소·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 개정('20.7.22)

\* (일반 증권사) 자기자본의 50% 이내, (중기특화 증권사) 자기자본의 100% 이내

- **(평가)** 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## □ [지주]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

- **(현황)**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'21.9월말까지 10%p 확대\*[규정개정\*\*('20.5.27) 및 금융위 의결('20.5.27, '20.12.22<sup>1)</sup>, '21.6.24]

\*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: (자기자본의) 10% → 20%  
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: (자기자본의) 20% → 30%

\*\*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- **(평가)** 경제 여건 변화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

## 나. 유동성 규제

### □ [은행]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\* 한시적 완화

\* 고유동성자산 /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≥ 외화 80%, 통합 100%

- **(현황)** '22.3월말까지 외화 LCR 80%→70%, 통합 LCR 100% → 85%로 인하[금융위 의결\*('20.4.16, '20.8.26, '21.3.8, '21.9.29<sup>1)</sup>]

\*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LCR 비율을 하향할 수 있음[은행업감독규정 26조①2호 등]

1) 당초('20.4.16) "'21.9월말까지"였던 조치 기한을 "'22.3월말까지"로 연장

- **(평가)** 외환시장 안정 및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

-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\* 및 시장 불안 완화

\* 현재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시 가산금리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  
☞ 가산금리(기준금리 대비 만개년이상) : ('19말) 26.8 ('20.6말) 76.6 ('20말) 39.4 ('21.6말) **145**

- 통합 LCR 완화에 따라 유동성버퍼\*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\*\*에 기여

\* 국내은행 통합 LCR(평균) : ('20.3월) 112.6% → ('21.12월) 105.1% [7.5%p ↓ (실제 하락폭은 △12.7%p이나, '22.2월 시행된 LCR 산정방식 개선효과(+5.2%p)를 감안)]

\*\* 국내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 : ('19) 47조원 → ('20) 108.9조원 → ('21) 92.6조원

#### □ [은행] 예대율\*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

\* 원화 대출금(가계대출×1.15+개인사업자대출×1+법인대출×0.85) / 원화 예수금 ≤ 100%

- (현황) '22.3월말까지 5%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·법령해석 발급('20.4.29, '21.3.15, '21.9.29)

- 한편, '20~'21.12월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 (100%→85%) [은행업감독규정 개정('20.6.24, '20.12.212, '21.6.23, '21.9.29<sup>1)</sup>)]

1) 적용대상을 당초('20.6.24) "'20년.상" 취급대출에서 "'21.12월" 취급대출까지 확대

- (평가) 유동성버퍼 확대로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

\* 예대율 : 1.2%p ↑ [( '20.3월) 95.6% → ('21.12월) 96.8%]

-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으로 개인사업자 지원여력 확대

#### □ [산은] 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)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NSFR(Net Stable Funding Ratio): 안정자금가용금액 /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≥ 100%

- (현황) 산은의 특수성\*을 고려하여 '22.6월말까지 20%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('20.5.8, '20.9.11<sup>1)</sup>)

\*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특수성 등을 감안

1) ('20.5.8) "90% 이내, '21.6월말까지" → ('20.9.11) "'80% 이내, '22.6월말까지"

- (평가) 산은의 코로나19 지원\* 확대에 기여

\* '20.1월~'21.12월까지의 기업대출·기업직접투자 증가분은 49.7조원

(참고) '18.1월~'19.12월까지의 기업대출·기업직접투자 증가분은 8.4조원

## □ **[보험]** 채안·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

- **(현황)** 보험사가 RP매도를 통해 채안·증안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\* 발급('20.4.21)

\* 보험업법시행령상 RP매도가 허용되는 "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"에 해당함을 명시

- **(평가)** 보험사의 적극적인 채안·증안펀드 참여에 기여

\* 보험사 채안·증안펀드 출자금 중 약 7.2%를 RP매도를 통해 조달('20년말 기준)

## □ **[보험]**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

- **(현황)**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 시\*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 중

\* '21.12월말 영업보고서 기준 경영실태 평가('22.3월)까지 적용

- **(평가)** 보험사 유동성 관리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

\* '21.9월말 영업보고서 기준 평가('21.12월) 결과 평가대상 52개사 중 43개사 (83%)의 관련 지표 등급이 상승

## □ **[저축,여전]** 유동성비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/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 $\geq 100\%$

- **(현황)**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\*으로 인한 10%p이내 위반에 대해 '22.3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\*\*

\* 「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('20.4.1~)」에 따른 지원대상

\*\* (저축) 비조치의견서('21.9월), (여전) 안내공문 발송('21.9월)

- **(평가)** 유동성비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\* 실시에 기여

\*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실적('21.12월말 기준) : (저축) 5,310억원, (여전) 4,330억원



## □ [저축, 상호] 예대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대출금 / 예수금 ≤ (저축은행) '20년: 110%, '21년: 100% (상호금융) 80~100%

- (현황)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%p이내 위반에 대해 '22.3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\*

\* (저축은행) '21.9월, (상호금융) '21.9월

- (평가) 예대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\* 실시에 기여

\*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실적('21.12월말 기준) : (저축) 5,310억원, (상호) 6,969억원

## 다. 자산건전성 규제

## □ [공통]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\*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

\* 전 금융권은 '20.4.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실시→ 건전성 분류 하향에 따른 총당금 적립부담, 미수 이자의 수익인식 가능성 등 우려

- (현황)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(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)할 수 있고, ②미수이자를 회계 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발급\*

\* (은행·보험) '20.5.4, (저축은행) '20.5.7, (여전·상호) '20.4.29

※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→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

- (평가) 금융회사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프로그램을 이행\*하는데 기여

\*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원금·이자상환 유예 실적('21.11월말 기준)  
: (만기연장) 258.2조원(99.3만건), (원금상환 유예) 13.8조원(8.8만건),  
(이자상환 유예) 0.2조원(1.7만건)

## □ **[여전]**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\* 개선

\* 기존 여전업감독규정은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"고정 이하"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반면, 저축은행·상호금융업은 다른 소득 유무, 영업 계속 여부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"요주의이상"으로 분류 가능

- **(현황)** 폐업중이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규정 개정('20.4.29)
- **(평가)** 실제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## 라. 면책 등

## □ **[공통]**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

- **(현황)**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 시스템을 구축\*하여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('20.4.16)

\* (대상)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  
(요건)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
(절차)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 보장 등

- **(평가)**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## □ **[공통]** 경영공시·보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

- **(현황)**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공시·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\*

\* (은행·보험·금투) '20.5.4, (여전·저축·상호) '20.4.29

- **(평가)**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적 불확실성 제거 및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

\* 현재('21.12월말)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공시 등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는 없음

□ **[보험]**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(TM) 절차 준용 허용

- **(현황)**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·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 대신 비대면 녹취 등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('20.4.10)
  - \* 단, 녹취내용 점검, 청약철회기간 연장(+45일)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
- **(평가)**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면채널의 보험영업 위축 방지에 기여

□ **[여전]** 카드사 레버리지\* 한도 확대

- \* [총자산 - 차감항목(온렌딩대출)] / 자기자본 ≤ 6배
- **(현황)**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(6→8배\*) (여전업감독규정 개정, '20.9.25)
  - \* 단, 직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의 30% 이상 배당시 7배로 축소
- **(평가)** 카드사의 총자산 증대여력이 확대되어 코로나 지원에 기여

□ **[저축]** 영업구역內 의무여신비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- \* 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(수도권 50% 기타 40~30%) 유지 의무
- **(현황)**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%p이내 위반에 대해 '22.3월말까지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('21.9.29.)
- **(평가)**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
  - \* 저축은행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실적('21.12월말 기준) : 5,310억원

□ **[정책금융기관]**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**(현황)**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익성 지표 등을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 평가하도록 평가지침\* 개정('20.4.29)
  - \*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('21.7.30.)
- **(평가)**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\*에 기여
  - \* 자금공급 실적 (산·기·수은 실적합계) : ('19) 206.2조원 → ('20) 253.6조원 (23%↑)

### 3.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

#### [1] 보완 필요성

-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여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대출규모 증가\*, 잠재부실 대비\*\* 등 감안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

\* (총신용 증가율, YoY) '19.6월: 6.3% → '20.6월: 8.0% → '21.6월: 9.8%

\*\*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

-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, 규제자본 추가 적립,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

\* FSB 권고('20.3월) 등에 따라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던 해외 주요국도 최근 Pandexit 기조 등에 따라 대부분 조치 정상화 중(LCR, 레버리지규제 등)

- 다만, ①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(6개월 연장)될 예정이며, ②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

⇒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(공통)을 부여하되, ①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, ②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규제는 즉시 정상화 추진

#### ※ '21.9.29일 4차 유연화 방안 결정시 보도자료

- 금융위원장은 '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, 방역·경제 상황,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,
-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.
-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,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**[2]****구체적 방안****① 「은행 통합 LCR 한시적 완화\*」 기한 연장 및 단계적 정상화**

\* '22.3월말까지 통합 LCR 100%→85%로 인하
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기간, 규제 정상화시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정상화 추진

\* '21.12월 통합 LCR 현황('22.2월 시행된 LCR 산정방식 개선효과 반영 시, %)  
: (국내) 105.1, (시중) 96.5, (지방) 105.2, (특수) 110.2  
- 시중은행(6개) 중 4개가 100% 하회

- ➡ 은행의 LCR 정상화 준비를 위해 유연화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,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

**< 통합 LCR 단계적 정상화 방안 >**

	~'22.6월	7~9월	10~12월	'23.1~3월	4~6월	7월~
통합 LCR 규제비율	85% (-)	90% (+5%p)	92.5% (+2.5%p)	95% (+2.5%p)	97.5% (+2.5%p)	100% (+2.5%p)

※ 조치 사항 : 금융위 의결('22.3.30.)

**② 「은행 외화 LCR 한시적 완화\*」 기한 연장**

\* '22.3월말까지 외화 LCR 80% → 70%로 인하

- 모든 은행이 기존 규제비율(80%)을 상회하고 있으며,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외화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
- 다만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가 추가연장되는 만큼, 은행의 규제 정상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3개월 연장\* 후 유연화 조치 종료

\* 기재부(외국환거래법 소관)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,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상화 준비기간으로 3개월 연장 필요 입장

- ➡ (기한) “'22.3월말” → “'22.6월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 : 금융위 의결('22.3.30.)

### ③ 「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\*」 기한 연장

\* '22.3월말까지 예대율(10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- 유연화 조치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, 정상화 준비기간으로 3개월 연장 후 유연화 조치 종료

\* 은행 예대율 현황('21.12월 기준, %) : (국내은행) 96.8, (시중은행) 98.9, (지방은행) 96.9  
- 시중은행(6개) 중 1개가 100% 상회하였으나 '22년 100% 이하로 유지중

➡ (기한) “'22.3월말” → “'22.6월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 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('22.3월)

### ④ 「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\*」 기한 연장

\* '21.12월말 영업보고서 기준 경영실태 평가('22.3월)까지 적용

- 유연화 조치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, 정상화 준비기간으로 3개월 연장 후 유연화 조치 종료

➡ (기한) “'21.12월말 기준 평가시” → “'22.3월말 기준 평가시”로 연장

※ 조치 사항: 경영실태평가지 적용

### ⑤ 「저축은행·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\*」 기한 연장

\* '22.3월말까지 유동성비율(10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- 유연화 조치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, 정상화 준비기간으로 3개월 연장 후 유연화 조치 종료

\* 유동성비율 현황('21.12월말 기준, %) : (저축은행) 130.8, (여전사) 324.5

➡ (기한) “'22.3월말” → “'22.6월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·안내공문 재발송('22.3월)

⑥ 「저축은행·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\*」 기한 연장

\* '22.3월말까지 예대율(80~11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- 유연화 조치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, 정상화 준비기간으로 3개월 연장 후 유연화 조치 종료

\* 예대율 현황(%) : (저축은행, '21.12월 기준) 90.7, (상호금융, '21.12월 기준) 76.7

➡ (기한) “'22.3월말” → “'22.6월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('22.3월)

⑦ 「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\*」 기한 연장

\* '22.3월말까지 의무여신비율(30~5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- 유연화 조치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, 정상화 준비기간으로 3개월 연장 후 유연화 조치 종료

\*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현황('21.12월말 기준) : 63.1%

➡ (기한) “'22.3월말” → “'22.6월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('22.3월)

#### 4. 향후 일정

□ 보완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

- 통합 및 외화 LCR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: 3.30일 금융위 의결
- 은행 예대율,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, 저축은행·여전사 유동성비율, 저축은행·상호금융 예대율,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: 3월중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
- 기타 기한부 조치(산은 NSFR 한시적 적용 유예)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 연장·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

#### 5. 안건공개여부 : 공개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금융정책과 시장분석과 산업금융과 자본시장과	감독총괄국 은행감독국 신용감독국 은행리스크업무실 금융그룹감독실 보험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상호금융국 외환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
연 락 처	02-2100-2953 02-2100-2962 02-2100-2991 02-2100-2836 02-2100-2855 02-2100-2863 02-2100-2652 02-2100-2692	02-3145-8001 02-3145-8050 02-3145-8380 02-3145-8360 02-3145-8210 02-3145-7455 02-3145-7447 02-3145-6772 02-3145-8070 02-3145-7922 02-3145-7570